옥죄는 교과부·검찰…전남대 '사면초가'

총장 직선제 폐지 수용 않자 각종 제재
학자금 대출제한·검찰수사에 공황상태

총장 선거에 대한 검찰 수사로 촉발된 전남대 사태가 집행부의 임기 만료와 맞물리면서 대학이 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전남대는 오는 15일까지 직선제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현재 교과부의 대출제한 대학 평가·구조개혁 대상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8월17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9대 총장 선임의 방향이 불투명한데다 현 총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임기 만료가 가까워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직선제 폐지 불수용에 대한 교과부 제재 방침이 확고한데다 대출제한 등 각종 평가 기준이 되는 지표 성적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총장 직선제 제재 어떻게 진행됐나=교과부의 직선제 폐지에 대한 의지는 단호하다. 폐지에 동참하지 않는 대학에는 각종 사업 공모시 불이익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행·재정적 제재가 가해진다.

지난해 10월 교과부 방침에 반발해 광주교대 등 일부 교대들이 직선제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교과부의 제재에 20일 만에 손을 들고 말았다. 폐지에 반발한 교대들은 곧바로 지원대상 제외 대학이나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발표됐다. 이어 입학정원 20% 감축과 행·재정 지원 중단 통보가 뒤따라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인 강원대도 직선제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입학정원 감축(20%)과 각종 사업비(500억원 정도) 삭감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옥죄는 '학자금 대출제한''구조개혁 대상' 평가=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은 8월말 이뤄진다. 전남대는 대출제한 평가 4개 기준 중 가장 중요한 지표인 취업률이 49.6%로 교과부 제시 기준(51%)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표도 양호하지 않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태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선정된 원광대는 수시 모집시 상당수 학과들이 학생모집을 하지 못해 정원을 채우는데 애를 먹었다.

학자금 대출제한은 학생들이 학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피함은 물론 부실 대학이라는 이미지가 작용, 중상위권 우수 학생들의 대거 이탈을 초래해 대학의 수준마저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부른다.

9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구조개혁 대상 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3류 대학의 오명을 쓸 수도 있다. 대학 정원이 20%이상 줄어 들어 위상 추락은 물론 각종 신규 사업과 기존 예산들도 대폭 삭감되기 때문. 더욱이 구조개혁 평가 기준 중 직선제 폐지 수용은 100점 만점에 5점으로, 국립대 사이의 평가 점수 차가 2~3점인 것을 고려하면 절대적인 기준이다.

◇전남대 '직선제 유지' 우세=현재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전남대를 비롯해 전북대·목포대·부산대·경북대 등 5곳이다. 전북대 등 4개 대학은 직선제 폐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전남대는 여전히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쪽이 훨씬 강할 뿐만 아니라 논의 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다.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지만, 이 같은 의견이 공론화된 적이 없어 추진력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전남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직선제 문제를 교과부가 평가지표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 자치와 전남대의 역사성에 비춰 대학이 스스로 해결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대 어디로 가야 하나?=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현 총장의 임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직선제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리더십이 없는 탓이다. 더욱이 인수위를 꾸려 차기 총장 직무에 대비했던 임시 집행부의 업무가 검찰 수사로 중단돼 혼란은 날이 갈수록 현실화하고 있다.

2013년도 학생모집은 물론 향후 수년간 대학 수준과 위상의 척도가 될 교과부의 각종 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애타게 하는 대목이다.

어느 때보다 구성원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직선제와 관련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대학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지역 사회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지성적인 판단을 지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민주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시·도지사정책협의회에서 강운태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의장(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이해찬 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시종 충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강운태 의장, 박영준 전남도지사, 김두관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강운태 시장 "국회 세종시로 이전해야"

광주·대구 '달빛동맹' 시정 전분야 확대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방분권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또, 현재의 2할 자치를 5할 자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기존의 88고속도로를 조기에 확장하는 등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을 시정 전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새롭게 출범한 세종시로 36개 중앙부처가 이전한다면 국회도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부처 국·과장들이 절반의 업무를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초대의장을 맡고 있는 강 시장은 "민주당이 세종시 국회이전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는 지방정부를 무시하고 주먹구구식 감세정책을 펴면서 보존대책을 세우지 않아 지방을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시켜 놨다"며 "그 결과 우리 지방자치는 재정은 2할, 그리고 사무는 3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이를 5할 자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송영길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어 국무총리 공관에서 개최된 '국무총리와 광역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현재의 도시재생 관련법이 각 부처별로 제정되어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하고 "아파트 건설 중심의 재개발 방식이 아닌, 녹색공원이나 일터, 문화시설 등 SOC차원의 지원을 명시한 '도시재생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88고속도로 2015년까지 조기 확장, 광주~대구간 내륙철도 건설을 비롯해 광주·대구 시민 기념숲 조성, 청소년·공무원 교류 확대 등 10개 과제를 공동추진키로 하는 등 광주와 대구 간 달빛동맹을 강화하기로 김범일 대구시장과 합의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총장선거 교수 향응 수사

검찰, 수사 배경 의혹에 "교육부 등 지시 없었다"

전남대 총장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가 교수들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관련 교수들을 직접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지난 3일과 4일 관련 교수들을 소환조사를 벌이는 한편 전남대 본교와 여수캠퍼스, 전남대 의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를 분석중이다.

검찰은 전남대 총장 선거에서 1위 후보자로 선출된 박창수(59·의학과) 교수 측이 여수지역 한식당과 일식집 등에서 교수들을 상대로 향응을 접대하는 등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수들이 박 교수의 당선을 위해 법에 금지된 선거캠프를 구성하고 회합이나 모임을 가졌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박 교수와 지지 교수 등 15명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복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대학 총장선거 과정에서 이뤄졌던 관행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날 검찰 관계자는 "향응 접대가 고질적인 관행이라면 신속하게 뿌리 뽑아야하는 것 아니냐"며 "식당에서 수십 번 밥을 사고 골프 비용을 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검찰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서도 교육부나 대검찰청 등 외부·상급기관에서의 수사의뢰나 지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자의 진정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 내부자 역시 박 교수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진정 이후 수사를 벌이면서 이미 상당부분 내용을 밝혀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의지가 높은 만큼 박 교수 이외의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 수사대상이 현재는 일단 1위로 선출된 박 교수와 지지 교수들로 한정돼 있지만 후보자들이 '동일 행위'을 했다는 증거가 포착된다면 수사 대상은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역시나 소감도 '불통'

박주선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통과 여부 12일까지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가 제출됐다.

4일 법무부는 청와대의 재가를 거쳐 이날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체포동의서는 첫 번째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된 뒤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늦어도 오는 12일까지는 체포동의요구서의 통과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박주선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사법부의 체포 동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껄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지도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호평역앞):070)8829-9903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